

지방자치 발전 자원봉사 활동과



이 창 호
(李昶浩)

중앙일보 전문위원

I. 머 리 말

최근 2-3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자원봉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제도화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이 자원봉사의 바람은 대학, 기업, 공무원 사회로 확산되며 하나의 시대적 붐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이같은 자원봉사의 열기와 향후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이 열기가 작금의 지방자치 시대와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를 어떻게 조직화, 체계화시켜 행정효율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하려 한다.

II. 자원봉사의 확산과 전망

현재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고교생들의 봉사활동 제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중고교를 비롯, 각 분야의 자원봉사 확산 물결과 향

후 전망을 간추려 본다.

1. 중고교

95년 봄학기부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4개 시도가 중학 1년 신입생부터 봉사활동을 고입대신에 반영키로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서울 20만, 부산 7만여명 등 4개 시도의 중학 1년생 수십만명이 95년 한해동안 학교 밖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연간 40-50시간씩의 봉사활동을 뒀다. 96년 들어 이같은 제도화는 대전, 충남북, 전북으로 확산, 15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중고생들에게 연간 30-40시간씩의 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이같은 움직임외에도 95년 [5.31 교육개혁]은 당시 종합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란을 신설, 대학들이 입시전형시 학생들의 봉사경력을 반영토록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을 받아들여 얼마전 전국 94개 대학들은 97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입시생들의 봉사

역사회 봉사활동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클래스에서부터 학생들의 그 활동을 지도,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시간만 의무화시켜 놓고 학교, 선생님, 교육당국은 무관심한 기형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 학생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재 여러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금년도에 전국 6곳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내무부는 지방 시도와 함께 20곳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돕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도 15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하고 3억원 가까이를 들여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자원봉사 프로그램 백과]를 제작중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같이 학교, 교사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봉사활동을 정규 교과과목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학교측이 전담교사 등을 다수 배치, 지역사회

시설, 기관들과 정기적인 프로그램 연결고리를 갖든지 어떤 형태이든 학교측이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전국 450만명의 중고생들이 자원봉사 일거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 대학교

95년 봄학기 한양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사회봉사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교내에 사회봉사단을 설치한 이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도 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양대와 함께 동덕여대는 아예 대학생 사회봉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했고 이후 숙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서강대, 대구 계명대, 포항 한동대, 익산 원광대 등 전국 20여개 대학들이 사회봉사 과목을 선택, 혹은 필수과목으로 개설했다. 내년도에도 이대, 연대 등 10여개 대학이 과목개설을 준비중에 있어 사회봉사 과목 개설대학은

곧 4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봉사 과목은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덕여대, 성균관대 등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외에 한양대 등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2,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과목을 첫 개설한 원광대에선 첫 학기에 무려 3천5백명이 수강신청을 해 전국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학생 사회봉사는 이제 대학가에 한 봄을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는 봉사활동은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삼성화재에서 베트남 자원봉사를 위해 대학생 50명을 선발했는데 무려 1천5백명이 신청, 학생들의 해외봉사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케 했다.

대학생들의 사회봉사는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념 씨클활동이 퇴조되지

않고 최근 [한총련] 등의 부
활로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
자 사회는 대학생들의 봉사
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
는 듯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월 중순에 결성
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
회] 이다. 중앙일보사가 후원
미국의 브라운, 스탠포드대
등의 대학 자원봉사활동을
둘러보고 온 15명의 대학 총
학장 보직교수들은 최근 우
리의 대학 총학장들도 미국
의 [Campus Compact]과
같은 것을 결성하자며 동 협
의회를 창설하였다. 대교협이
후원해 열린 그날 창립대회
겸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무
려 3백여명의 총학장과 교수
들이 참석하였고 당일 106개
대학의 총학장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
록했다. 현재 이들 참가대학
및 전문대학수는 서울대, 연
대를 비롯, 모두 153개에 이
른다. 이 대학사회 봉사협의
회는 내년도 사업으로 Cam-
pus Volunteer Fair, 세미나,
해외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
어 우리나라 대학생 봉사활

동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기업

중고교, 대학과 더불어 자
원봉사가 확산되고 있는 영
역이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활
동을 보이는 기업으로 단연
삼성그룹을 꼽을 수 있다. 삼
성은 94년 10월 그룹차원의
[삼성사회봉사단]을 창단한
뒤 전 계열사 산하에 사회봉
사단을 설립케 하면서 전 그
룹차원의 사원 자원봉사 활
동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그
룹 사회봉사단 직원만 15명,
전 계열사 담당직원수만 해
도 1백명 이상이 되고 있는
데 이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것이다.

삼성 사회봉사활동은 그같
은 투자에 걸맞게 그동안 많
은 봉사활동을 펼쳐 기업 이
미지를 바꿔 나가고 있다. 삼
풍사고와 금년 여름 경기, 강
원지역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보여준 삼성 직원들의 봉사
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두 재해현장에 삼성은 약 한
달간씩 연인원 수천명의 사
원들을 보내 봉사활동을 펴
게 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직원들은 고베 지진현장에서,
삼성중공업은 남해 기름오염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펴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찬사
를 받았다.

삼성과 그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몇몇 기업들도
사원 봉사활동에 관심을 보
이고 있다. 현대전자, 진로,
쌍용 같은 기업은 사원연수
에 봉사활동을 포함시켰고
현대그룹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없애고 대신 봉
사경력 등을 채용요강으로
발표했다.

기업들의 사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앞으로
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미국
의 경우 [기업 자원봉사]
(corporate volunteerism)는
70년대 초부터 등장해 오늘
날엔 각 지역단위로 [기업
자원봉사협의회] (CVC:
Corporate Volunteer Coun-
cil)가 결성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는 삼성만이 사

회봉사단을 창단하는 등 회 사측의 제도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기업들에게도 대폭 확대될 것이다.

4. 정부

중고대학생, 기업체 사원 등 민간영역과 더불어 자원봉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정부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외에도 시도 정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현재 내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공익자원봉사법]을 추진중이며 복지부, 문체부, 정무1·정무2장관실도 역시 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안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될 자원봉사진흥법이 통과되면 동 법에 따라 [자원봉사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자원봉사는 더욱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 법은 또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 정부적 자원봉사협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각 시도에도 비슷한 기구를

두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통과가 불투명하지만 논의가 계속돼 언젠가는 입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도자치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시도들의 경우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에 새로운 주민참여로 자원봉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울들어 구단위의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이다. 송파구는 구청장의 의지로 1억4천만원을 지원, 민간협업체의 자원봉사단을 설립토록 했다. 그리고 관내 3천여명의 주민들로 부터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활동을 배치하고 있다. 송파구외에도 서울 양천구, 강서구 등도 주민 자원봉사협의체, 또는 특정분야 자원봉사단(예, 양천구의 외국어번역 자원봉사단)을 구성, 활동케 하고 있다.

이같은 직접적인 개입외에도 많은 시도가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경남도의 경우 울들어도 사회봉사과를

신설,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행정지원토록 했다. 경남도는 도외에 관내 각 시군구에 자원봉사계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자원봉사계는 서울에선 양천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도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이다. 현재 내무부가 주무부처로 되면서 새마을을 지원하는 각 시도 사회진흥과가 주무과가 되고 있다. 이들 각 시도는 내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20개 대상 시도중 대다수가 센터를 직영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빌리고 있다. 내무부는 최근 시도가 매칭펀드를 주어진 센터를 설립하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50개 중소 시도가 신청,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전국 시도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반영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퇴조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

하고 있는 범국민운동이 자원봉사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아직도 자원봉사와 새마을 유형의 국민운동과의 차이를 구별치 못해 주춤거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념이 이해되고 개입방법이 정착되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적, 물적지원이 크게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5. 사회단체

자원봉사 활성화에 어느 곳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은 사회단체들이다. 사회단체들은 그 자체가 곧 자원봉사단체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봉사 운동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단체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이다. 94년 4월 35개의 단체들이 연합, 결성한 이 단체는 현재 56개의 회원단체들을 확보하고 창립후 세미나, 세계자원봉사의 날 기념식등 몇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펼쳐 왔다. 내년 4월에는 [세계자원봉사협회] (IAVE)

아·태지역대회를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

한봉협외에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개발원 등은 복지부, 문체부 등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펴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협의회에 사회복지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6개 도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한편 연초엔 문체부 지원으로 문화복지협의회가 구성되고 산하에 사랑의 자원봉사단을 구성, 활동중이다.

이들 기존 사회단체들외에 최근에 경실련,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 NGO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소위 시민단체들은 9월 말 정부1장관실의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의 자원봉사 단체들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복지, 문화분야 외의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목되는 활동이 최근 시작된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 시범마을]운동이다. 이 운동은 [한국사회복지 프로그램연구회]라는 단체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올 5월 시작한 것인데 전국 4개 대학과 합동으로 서울 송파구, 부천시, 강원도 횡성군, 전주시 평화동 등 4개 지역을 시범마을로 지정, 민-관 협력의 자원봉사 주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구청지원으로 자원봉사단이 조직된 송파구의 예도 부천, 횡성군, 전주시가 역시 9, 10월중에 대규모 시민 공청회를 가졌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역사회 문제들을 정해 각 초중고대학, 주부, 회사 등 각 집단별로 해결을 위한 범 자원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자원봉사 시범마을 사업은 장차 내 고장 명소만들기 사업 1차년도 마감일인 97년도 2월이후인 2차년도에는 전국 20여 곳으로 대상지역을 확대, 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Ⅲ. 지방자치시대와 자원봉사

그러면 이상과 같은 자원봉사의 확산물결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 것인가? 확실히 지방자치의 개막은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지방간 경쟁을 통해 국가적 생산성이 향상된다. 사회적으로는 열린사회, 자율사회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이같은 긍정적인 면과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경제 사회적 격차, 풀어진 중앙통제 등으로 국가적 발전력이 오히려 약화될 위험도 있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형을 대신할 지역의 자율적, 자발적 행정능력을 얼마나 개발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새 민선단체장들이 지방 자율행정의 묘를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기업체 유치하면서 각종 세제, 행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그 같은 창의적 자율행정의 한 예일 것이다. 지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독창적, 생산적 행정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내고 중앙정부는 지역간 경쟁 또는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이 지방자치 발전에 자원봉사는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운동은 과거 관주도의 하향식 주민동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민참여의 새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단 순히 상향식, 자발적 주민참여 정도가 아닌 선진국 자원봉사 발달의 3가지 동인(motives), 즉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생산성](social productivity), [사회적 개방성](social openness)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만큼 필요해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자원봉

사 운동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의 그 3가지 역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지방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자원봉사는 주민들이 진정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구현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는 곧 모든 시민이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즉 시민-주민-개개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같은 자원봉사운동은 필연적으로 정치 선진화에 기여치 않을 수가 없다.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 있는 사회에서 금권, 관권 등의 타락선거가 이루어 질 수가 없다. 또 지역주민 의사에 반하는 중앙정치로부터의 하향식, 보스중심의 정치행태가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선거에 임하며 선거후에도 행정, 정치에 직·간접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것이다.

사실 선거 자원봉사는 선진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 운동의 하나이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가 모두 자원봉사자로 치루어 진다. 소위 [무보수 선거운동원]들이 그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선거법]을 통해 그같은 자원봉사자 참여의 길이 열렸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공선협 등 시민단체들이 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공명선거 자원봉사운동을 벌일 뿐이다. 앞으로 선거 자원봉사 운동이 선진국과 같이 자리를 잡는다면 정치 선진화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지방 행정에 참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지방

행정에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행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게 한다. 주민들은 무보수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정책결정에 자문을 주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대민행정을 도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부 지방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명예군수제, 주민대의제 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 주민들이 시청 등 관공서에서 안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일일 주차 봉사요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방행정을 돕는 일이다. 공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청소년선도위원으로 비행청소년을 돌보는 것도 모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관공서에서 공공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열린사회, 민주사회 발전의 첫걸음이다. 현재 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이에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장차 많은 모델들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경제의 향상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를 돕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그러나 그같은 소극적 방향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이 경제발전을 도울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휴인력의 활용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노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교육봉사를 한다든지 주부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불우노인과 아동들을 돌보는 것 등이다. 그밖에도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대학생이 중고학생들의 방과후 공부를 지도한다든지, 기업체 전문직 사원들이 대학에서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도 모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4. 사회비리의 척결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솔선하는 열린사회에는 부정과

비리와 발붙일 틈이 없다. 주민들이 관공서에서 행정 자원봉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사로, 운영위원으로, 또 직접 봉사자로 봉사에 나설 경우 해당 시설에서는 비리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대거 학교행정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원봉사 3대 기능의 하나인 [사회적 개방성]이 바로 이같은 열린사회를 구현함을 뜻한다.

5. 사회비용의 감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가 많은 지역사회에는 범죄, 부정 등이 줄어 그에따른 사회비용(social cost)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과 미래의 사회범죄를 줄이는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원봉사는 또 청소년들의 적성을 발견,

평생직업을 잘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Ⅳ. 지자체와 자원봉사 발전의 과제

그러면 이상과 같은 자원봉사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의 자원봉사 확산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본다.

1.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등을 전담할 자원봉사센터의 건립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고교생을 비롯 수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모르는 점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하루빨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교육·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따라 현재 내무부가 20억원을 들여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전국 20개 시도에서 추진중에 있다. 그 중 어느 시도는 민간위탁을, 어느 시도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서로 위탁을 받으려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한 지자체에 한 두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에 501개, 영국은 250개, 일본은 2000여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들 센터는 한 개의 전달체계안에서 전국 지역사회별로 확산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각 부처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자원봉사 센터를 설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서로 자원봉사의 체계모니를 쥐기 위해 자체의 민간 산하 단체들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체부

는 청소년단체들에, 내무부는 새롭게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그리고 시급히 설립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행정라인, 다수의 센터들이 각기 동일한 표적 집단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을 빚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와 내무부 지원의 종합자원봉사센터간에 전혀 상호협조가 안되고 있다. 이 갈등을 지자체가 어떻게 조정하여 자원봉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2. 자원봉사 행정 조정기구의 설치

현재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관련 부서는 사회과,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부녀복지과 등 수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각 부서는 각각 다른 중앙부처의 지휘와 예산지원을 받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서의 지적대로 현재 중앙부처의 자원봉사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원봉사 지원도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 센터들이 갈등을 빚는 것도 바로 이같은 정부의 지휘체계가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와 같이 자원봉사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속성상 타 부서 개입을 배제하고 한 부서가 업무를 독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의 경우 한 지자체내에 다수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이라면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직속으로 각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협의체를 두어 늘 행정지원의 전체를 조감토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행정지원 방식은 바로 일

본이 택하고 있는 것이다.

3. 자원봉사 민간협의체 운동의 지원

자원봉사를 민간주도로 끌고 가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지자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지원이 지나쳐 관주도로 갔다가는 과거의 새마을과 같은 관변운동으로 변신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현재는 변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원봉사운동이 지자체 단위에서 양적으로 보다 활성화되고 주민주도의 민간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민간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주민협의체의 탄생을 말한다. 주민들이 한데 모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민간협의체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절로 탄생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히 앞서 설명한 [한국사회복지프로그램연구회]의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 시범마을]이 시작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시범마을운동은 중앙일보사와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있어 순수 민간운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과연 얼마나한 확산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과거와 같이 지자체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다. 즉 시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이 관내 유력인사들을 모아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토록 권유하는 것이다. 그 협의체 운동에 지자체는 얼마간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자체 개입은 초기에 끝나야 함은 물론이다. 협의체 구성과 그후 얼마간의 활동때까지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민

간운동이 자립(self-support)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한 방법은 초기에 아예 정부지원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라는 주문은 그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나 자칫 개입을 허용하다보면 단체장에겐 정치적 위험성을 안기고 실무자에겐 관변운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민간주도가 되고 관은 측면지원하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의 의식이 민과 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겠다. 그점에서 앞서 언급한 자원봉사 시범마을운동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시범마을운동을 민간 파트너로 해 민간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설립운동이 지역마다 전개될 때 진정한 주민스스로의 범국민적 자원봉사운동이 꽃핀다고 할 수 있겠다. **한정환**